

Editorial Comment

국제연합(UN)을 비롯한 대다수 문화권에서는 노인의 기준을 설정할 때 65세라는 연령을 근거로 하고 있다. 또 국제연합에서는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%를 넘을 경우 aging society (고령화사회) 그리고 14%를 넘을 경우 aged society라고 부른다.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사회는 대부분 이미 선진국으로 알려진 나라들인 반면, 노인들의 인구 비율이 낮은 사회는 개발도상국들이다.

우리 나라의 경우 노인인구 비율이 2년이나 3년 정도 이내에 7%에 해당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 노인인구 비율을 토대로 선진국의 문턱에 다가섰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만하다.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은 이미 선진화된 사회들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. 예를 들면, 일본의 경우 노인인구 비율이 5%에서 10%로 증가하는데 걸린 기간이 35년 (1951년에서 1986년) 정도이었던 반면, 미국의 경우는 거의 47년 (1925년에서 1972년) 정도 소요되었다.

우리 나라의 노인인구가 약 10%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는 2020년경이다. 그렇다면 몇 년 전 이미 5%를 넘어섰으니까 25년만에 5%에서 10%로 증가하게 될 상황이다. 여기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. 질병, 심리적 적응, 영양, 주거, 복지 등 생활의 제반 분야에서 노인들에게 고유한 문제들이 파생될 것이고, 그러한 문제를 전담해야 할 전문인력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될 것이다.

그 동안 우리 문화권에서는 노인의 보호나 욕구충족 등의 문제를 가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만 생각해 왔지만, 산업화 과정을 통하여 그리고 노인인구 증가로 인하여 이제는 그 문제를 사회 전체가

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탈바꿈하고 있다. 이미 선진화된 사회에서는 노인인구의 증가에 대한 문제를 상당한 기간을 두고 대응할 수 있었지만, 우리는 시기적으로 매우 조급한 실정이다.

노년학에 대한 연구는 특정하게 구분된 영역이 아니다. 의학이나 간호학, 약학, 보건학, 심리학, 사회학, 복지학, 가정학, 건축학, 행정학, 법학 등 어느 분야에서든지 노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전문가들이 두루 양성되어야 한다. 20년이나 30년 후의 우리 나라의 안정된 모습은 사명감을 가지고 접근해나가는 전문가의 절대적인 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.

다행히 노년학에 관심을 둔 지지자들이 1990년대에 들어와서 부쩍 늘어나고 있다. 그 예로 한국노년학연구회가 발족된 지 벌써 9년째에 접어들었고, **한국노년학연구**도 이제 제7권을 발간하고 있다. 또 내년에는 매 4년마다 1회씩 개최되는 아시아/오세아니아지역 국제노년학회(Asia/Oceania Regional Congress of Gerontology)가 우리 나라에서 열리게 된다. 회의 참석이나 학술 활동은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문제를 대처해나가는 전문가로 성장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.

윤 가 현